

‘한 방’은 없고 구태는 여전

국정감사 7일째

與, MB·朴 적폐실체 공개 野, 정부 무능 프레임 맞붙 고성·막말에 파행 빈번 무분별 증인 신청 기싸움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18일로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적폐청산 대 신(新)적폐’로 여야 간 공방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국감이 정치공방으로 얼룩지면서, 기대했던 ‘한 방’은 터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정치공작 사건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실체를 날카롭게 공개하겠다고 벌려왔다. 반면, 보수 야당은 안보, 공영방송 파업, 복지 등 전방위에 걸쳐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치겠다고면서 신적폐 공세로 맞붙을 뵈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두 당의 정치공방에서 한 발짝 벗어나 정책국감을 약속했었다.

실제 국감 초반 여야는 이 같은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국감 시작과 함께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 조사를 발표하면서 공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됐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지난 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폭로하며 구(舊)여권을 압박했지만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전시작



국방위 무기 점검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육군항공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아파치 헬기와 탑재되는 무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 조기전환 반대, 전술핵재배치, 대북 정책 기조변화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30분’ 행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예상됐던 대로 공영방송 개혁이 쟁점이 됐다. MBC·KBS 노조의 파업을 놓고 오랜 적폐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한 여당은 경영진의 처벌과 책임을 촉구한 반면, 보수 야당은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한미 자

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관련 상임위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FTA와 탈원전이 논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셴고 국정교과서 문제가 논의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적폐청산 공세가 우위를 점했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는 컸지만 정작 국감 전체를 흔들 만한 대형 이슈 이른바 ‘한 방’은 없었다. ‘땀뻘 국감’이라는 관전평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국감장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고성, 막말, 파행 등 고질적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증인 신청을 둘러싼 출다리기도 여전했다. 거물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국감 내내 현재진

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고, 중량급 인사들의 국감 불출석 관행도 바뀌지 않았다.

국방위는 애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다만, 김관진 전 실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노위와 과방위에서는 정의당이 각각 4대강 사업 및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또 과방위 5대 핵심 증인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종관 전 홍보수석 등은 모두 불출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근로자 삶의 질 개선” vs “최저임금 인상 빈곤 촉진”

한노위, 정부 노동정책 놓고 여야 공방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삼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얻게 될 이익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중당 강병원 의원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하면 청년일자리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도 “중소기업으로 안 가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일

자리를 양질화할 것인가, 대기업 이익을 연관 중소기업과 나누면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면서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가맹점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일부 보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자영업자 임대료 부분, 불공정행위 개선으로 논의가 흘러가야 한다. 자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을 싸우도록 만들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민중연대 선거제 개편 간담회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편 민중연대’가 18일 국회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선거제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연대체가 모인 민중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과 표심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두관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정동영·송기석·박주현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번째 간담회를 연 민중연대는 조만간 정식으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브리핑

송기석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8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장학금 지원 포털 서비스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공기관 대상 아이디어 도용 전수조사를 벌여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인 ‘드림스폰’의 아이디어를 훔쳐 장학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자사 보유 시스템보



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 ‘드림스폰’ 관계자들을 만나 사이트 노하우를 들은 후 이를 재단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장학금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피해 업체는 한국장학재단이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하면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알고서 만났지만 노하우를 빼앗기고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는 “개발자와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60% 불법매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8일 “최근 5년 동안 불고기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흔회 피해 고래)가 7891마리인데, 이 가운데 60%는 불법매매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은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래 흔회 및 포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흔회된 고래 7891마리 가운데 적정한 절차에 따라 수협에 공식 위판된 고래는 2851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나머지 고래 5040마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흔회 피해 고래 유통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해수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해경은 흔회돼 죽은 고래에 한해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흔회를 신고한 사람은 지정된 수협 위판장에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며 고래를 공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상권이 등 흔회되고 있는 고래들은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로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며 “해경과 해수부, 수협은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흔회 고래 불법매매 근절에 나서서 한편 흔회를 방지한 조직적인 포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며 고래를 공식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상권이 등 흔회되고 있는 고래들은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로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며 “해경과 해수부, 수협은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흔회 고래 불법매매 근절에 나서서 한편 흔회를 방지한 조직적인 포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한국당 “김영란법 정기국회 내 개정”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기로 했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이에 결정했다.

TF 팀장인 이원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현재 정부위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위에는 농축어업계 피해 보안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6건 계류돼 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등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관계자들도 “지난 추석 전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3로 36